민선5기 광주·전남 공동현안 어떻게…

광역경제권 사업 수정 건의 광주공항 이전 장기과제로

소득없이 끝난 강운태·박준영 첫 만남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문제를 둘러싼 광주·전남의 현격한 입장차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시의 '선 무안공항 정부지원 촉구' 주장에 대해 전남도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이를 협의하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이 무안공항을 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최대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다. 반면 광주시는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이 결국 전체 공항수요의 감소로 이어져 무안공항에 보탬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해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6일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30분 회동'은 광주·전남이 지역 현안에 한 목소리를 내왔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전남 따로 갈 수 없다**=6일 오전 광주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광주·전남의 두 수장은 '5+2 광역경제권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보였다.

광역경제권 사업이 애초부터 영남권과 불균형하게 지정된데다 LED산업이나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호남권 선도사업을 다른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등 중복사업 배제라는 본래 취지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강 시장과 박 지사는 5+2 광역경제권과 관련, 호남권 광역경제권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원배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집중육성 지원 ▲내륙초광역개발권 권역 조정 등 3개 항의 건의안 채택을 주도했다. 강 시장은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권역 설정 및 권역별 선도프로젝트와 선도산업 선정 등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며 "내년에 스마트그리드 사업과 같은 광주·전남·전북 간 연계협력 사업 발굴을 위해 3개 시도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도 "호남권이 타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예산 자원의 지역간 적정배분이 필요하며 호남권 광역경제권사업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동현안 외에도 호남권 광역경제권 사업에 포함된 호남고속철도, R&D특구 조성, 광역철도사업과 나주공동혁신도시 및 광주·전남 빛그린산업단지 등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은 머리를 맞대야 한다. 또 전남의 2012년 여수엑스포, F1대회 등의 개최를 위해 광주의 지원은 절실하며, 광주 역시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전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광주공항 이전 장기 과제로 남을 듯**=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 내용을 담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예상대로 광주는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 반대 및 보완'을, 전남은 '정부 방침대로 조속한 이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는 광주·전남을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검토해 이달 말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광주시가 애초 무안공항 활성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토해양부는 광주공항의 국내선 이전 시점을 못박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역 내 여론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이전 결정만 원칙적으로 수립해두고, 이전 시점은 광주와 전남의 여론을 살펴 결정한다는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6일 개막한 고흥 길두리 안동고문 유물 기획전에서 관람객들이 복원된 금동관모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흥 안동고분 출토 금동유물 공개

금동관모·신발·갑옷·투구·살포 전남대박물관 4년만에 원형 복원

독특한 양식과 금동관모 등 특이한 유물로 역사학계에 반향을 일으켰던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유물이 6일 일반인에 최초로 공개됐다.

전남대 박물관(관장 이영효)은 지난 2006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한 보존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안동고분 유물 기획전을 전남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당시 전남대 인류학과 임영진 교수팀에 의해 발굴된 길두리 안동고분에서는 금동관모(金銅冠帽), 금동신발 등 188점의 금속유물들이 확인됐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가 4년간의 복원작업 끝에 유물들의 옛 모습을 되찾아냈다.

특히 이 유물들은 5세기 때 고흥반도를 비롯한 전남 남해안지역 토착세력의 성격과 당시 백제와 지방세력 간의 정치적·문화적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금동관모는 높이 23.2㎝로 고깔 모양의 구조에 금동판을 도려내어(투조·透彫) 잎사귀를 형상화한 무늬를 넣었고, 꽃봉오리 장식물이 정수리에 꽂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동신발은 한 쌍이며 모두 길이 30㎝, 높이 10㎝ 크기이다. 신발 상면에는 'T자'형태의 문양이 투조되어 있고, 바닥에는 마름모꼴 문양이 투조되어 있다. 철제유물로는 갑옷과 투구, 환두도, 살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외에도 철제유물 가운데 중요유물로는 갑옷 1벌과 투구 2점, 살포 1점 등도 전시됐다. 복원 결과 갑옷은 현재 높이 35㎝의 횡장판정결판갑(橫裝板釘結板甲)으로 투구는 챙이 달려 있다.

함께 출토된 살포(긴 자루가 달린 작은 삽과 같은 것으로고대 농경사회의 수장을 나타내는 상징물)는 자루까지 철로 되어 있으며 전체길이 168㎝로 현재까지 출토된 살포 중 가장 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진 교수는 "전시된 유물들은 발굴현장 수습에서부터 보존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보존과학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좋은 사례"라며 "복원과정을 통해 얻은 중요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자료들과의 심도 있는 비교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전은 내년 2월 25일까지 열린다. 문의 062-530-358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역예산은 말도 못 꺼내고…

국회 예결특위 4대강 격론…광주·전남 현안 논의도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 활동이 막판을 치닫고 있으나 광주·전남 지역 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6일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수소위는 일상적으로 감액 대상 예산을 심의한 뒤 증액 또는 신규 예산을 논의한다. 그런데 이날까지 4대강 사업 등 감액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있어서 대부분이 증액 또는 신규인 광주·전남지역 주요 국비예산은 거론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수소위는 이날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감액심사를 벌이고 있으나 진통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4대강 사업 감액을 놓고 여야가 의견차가 너무나 커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자칫 감액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증액·신규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않은 채 계수소위 활동이 파행 또는 종료된다면 상임위 등에서 어렵게 반영했던 각종 지역 예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문방위는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현안 예산 중 F1 대회 지원액 368억원과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비 18억여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비는 370억원(총 770억원), 광주 하계U대회 지원비 70억원(총액 110억원), 광주 첨단문화클러스터 조성비 2억원(총 4억원)을 각각 증액 반영했다.

복지위도 국립소록도병원 병사 개보수 비용 38억원을 증액해 76억2700만원을 반영했으며 2012년 여수박람회 기간 동안 발생하는 부랑인 및 노숙인의 보호에 필요한 시설 확충 목적 등 전국의 부랑인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17억5600만원을 증액, 총 36억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 국토위에서는 여수국가산단진입도로 1000억원 증액, 목포-광양/전주-광양 고속도로 각 800억원, 216억원 증액, 신항정화사업비 43억원 증액, 관내도로 정비 2건 441억원 신규지원 등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국고지원 예산에 대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위원들의 증액 의견을 첨부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따라서 이 같은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액·신규 심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광주·전남 출신인 민주당 서갑원·장병완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등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이 4대강 예산 삭감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어 광주·전남지역 출신 의원들의 지역예산 지키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어렵게 만들어낸 각 지역 예산이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로 물거품이 된 선례가 두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대강 예산 삭감 문제를 보류하고 증액·신규예산 논의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예산을 여권에 일방적으로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민주, 한미 FTA 반대 총공세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따른 안보정국 속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진 민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 협상 이슈를 부각시키며 총공세에 나섰다.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원내외 투쟁에 힘이 부치던 민주당은 우리나라에 불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정국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호재로 평가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 쇠고기 졸속 협상으로 국민 건강권을 팔아먹더니 다시 한 번 국가적 수치를 맛보게 했다"며 대통령 사과와 협상안 폐기를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미 FTA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준 굴욕 외교의 결정타"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이 정부는 안보 실패를 매국 협상과 바꿔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번 재협상은 국익을 말살한 얼간이 무역협정으로,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교전수칙(한미FTA) 마련으로 무역전쟁에서 패배하게 돼버렸다"며 "이 대통령이 미국의 산타클로스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미 FTA 추가 협상이 국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에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이명박 정부의 무능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을 부추겨 장기적으로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어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추가 협상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파동 때에 이은 '제2의 촛불사태'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대강 사업과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를 촉매제로 총선, 대선을 겨냥한 야권 연대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